

투표지 스캔 보관·해킹 차단...선거부정 끼어들 여지 없다

전남선관위 모의개표 현장 가보니

확인 또 확인 이상없자 개봉 허가
투표지분류기 무선통신 불가능
재확인 대상 투표지 철저한 검증

“투표참관인 이의 있습니다. 투표함의 특수봉인 지에 뜯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12일 오후 보성군 다비치호텔 2층 세미나실은 투표함과 투표지분류기, 투표참관인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인원들로 가득했다.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로 가득한 투표함을 들고 개표장 입구에 도착하자, 접수부 직원이 다가와 특수봉인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이때 투표참관인이 특수봉인지에 이상이 있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특수봉인지는 투표를 마친 투표함에 부착되는데, 제거될 경우 흔적이 남는다. 투표함을 개봉하거나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이송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과 투표참관인 동행시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봉인지 보안 후 확인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접수부 직원은 투표소에서 작성된 투표목록과 잔여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자 투표함 개봉을 허가했다.

이날 보성에서 진행된 ‘모의개표 실습·시연’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이날 모의개표는 22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50여명이 참여했다. 투표함과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보관상자 등 실제 개표 현장에나 볼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해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개표 상황을 연출 원활한 개표와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기획했다.

특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견주 투표용지가 많아 개표 과정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 이에 전남선관위는 사전에 개표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이날 전남선관위는 실제 개표현장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투명한 개표절차를 안내했다. 수검표와 투표지분류기 보안강화, 투표지 이미지 보관 등의 조치를 통해 개표의 신뢰성을 담고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앞서 개함부로 전달된 투표용지가 테이블 위로 쏟아지자, 선거사무보조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수거해 선거별로 구분했다. 분류된 투표지는 바구니에 담긴 채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넘겨졌다.

이곳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자동으로 득표자 별 분류 작업이 진행됐다.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해킹이나 무선통신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장비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그 이미지가 해당 선거 선출직의 임기만료시까지 기기에 보존된다. 물론, 분류기는 지나더라도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세는 작업이 남아있다. 이후 심사집계부로 넘어간 투표용지는 투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의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에서 넘어온 묶음에 다른 후보자 투표지가 나왔습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확인해 보니 선거사무원이 분류기에 끼인 투표지를 다른 후보 묶음에 잘 못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는 투표용지가 뜯어지거나, 도장이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아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 여부를 판단했다.

이후 다시 한번 후보자별로 득표한 투표용지를 계수기에 넣고 몇장인지 확인한 후 묶어 책임사무원의 확인 서명을 받은 뒤 개표상황표 확인식으로 넘겨졌다. 투표지 수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 수 등 개표 내용이 담긴 개표상황표는 투표용지와 함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확인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0여 일 앞둔 12일 오후 보성 울포 다비치콘도에서 열린 ‘모의개표 실습 및 시연’에 참석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법 등을 익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받아 정리부로 넘겨졌다. 정리부에서는 실시간으로 투표결과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개표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겨날 수 있어 먼저 개봉된 투표함이 이상 없이 분류되기 전까지 다른 투표함은 개봉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이날 선관위의 모의개표는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투표용지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며 단 한장의 오차도 제거하기 위한 개표 과정은 실제 상황과 다를 바 없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는 국민의 선택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마지막 단계”라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개표 결과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공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태국 연구단, ‘인권도시 광주’ 노하우 배워갔다

행정 시스템 벤치마킹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권도시’ 광주의 선진 행정 시스템과 정책 노하우가 태국 지방정부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이식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태국 인권도시발전연구단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광주시의 인권 행정 체계와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돌아갔다.

이번 방문은 태국 측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인권도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연구단은 방한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연구기관을 돌며 정책 조사를 벌였다. 특히 아시아 인권의 상징인 광주를 필수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광주시청을 찾은 연구단은 광주가 걸여온 인권 정책의 역사와 제도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축적해온 인권 행정의 경험과 구체적인 우수 사례들을 가감 없이 공유했다.

연구단은 광주가 구축한 총총한 제도적 안전장

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인권 증진조례를 비롯해 인권헌장 선포, 5년 주기의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지표 관리, 인권옹호부스맨 및 영향평가 제도 등 인권 가치를 행정 전반에 뿌리내리게 한 시스템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연구단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과거 국가 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 정신이 어떻게 공공의 기억으로 기록·보존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인권도시’라는 정체성과 국제적 연대로 확장되었는지 확인했다.

태국 연구단은 현재 광주시와 함께 인도네시아 팔루, 스웨덴 룬드, 영국 요크 등을 비교 연구 도시로 선정해 분석 중이다. 이들은 이번 광주 방문 결과를 토대로 태국 실정에 맞는 인권도시 지표와 모델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최종적으로는 ‘인권 기반 접근법(HRBA)’을 적용한 정책 제안과 법·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방북과 치앙마이, 콘렌 등 태국의 주요 도시에 적용할 ‘인권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광양 신규 지정

직업훈련·생활안정 등 각종 지원

광양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던 여수는 지원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던 여수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광양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월 27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향후 6개월간 지원 기간을 연장키로 해 고용안정 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또 광양시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이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유럽의 고율관세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했다.

여수·광양 근로자와 기업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각종 지원 및 자격조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원→500만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000만원→2500만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원→15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000만원→2000만원), 국민취업제도 II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요건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7%→80%, 1인당 하루 6만 8000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130%), 법인·소득·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도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석유화학·철강산업 특별법’을 통해 4조 6000억원 규모의 ‘산업 대전환메가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신규 지정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 전환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소위 통과...시민사회 ‘줄속 입법’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자치분권의 본질이 훼손된 줄속 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치분권·행정통합·정치개혁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은 12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당초 사·도민에게 약속했던 자치권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핵심 가치가 실

종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가 맞물려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필수 특례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 없이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되는 작금의 상황은 사·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이기원 단상에 세이집

生

누가 호박꽃도 꽃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토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진 않지만 실속파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표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못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이기원

1957년에 태어났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18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 『바람 나그네』, 『회전목마 인생』, 『밥벌레의 행복』, 『이방인』, 『생(生)』 등을 펴냈다.

태어날 생(生)이냐,
살아갈 생(生)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 서점 판매: 광주(충장서림, 영풍문고) / 나주(중로서적), 목포(연산서적) /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 익산(동아서점)

312쪽 | 값 16,000원